

경제

주택 구입 부담 광주·전남 최저

주택 구입 능력지수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낮은 가격·보금률 등 내집 마련 쉬워

광주·전남 지역 도시 근로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 도시 근로자들의 가계 소득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높은 주택 보금률 등을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쉽게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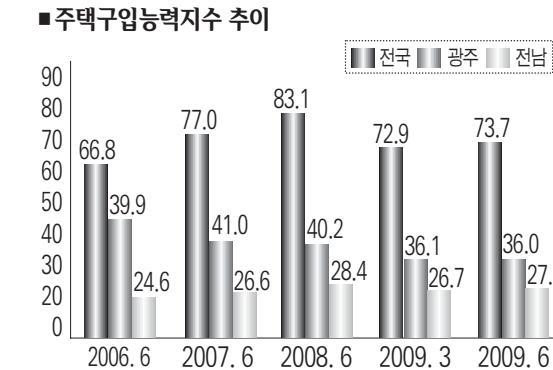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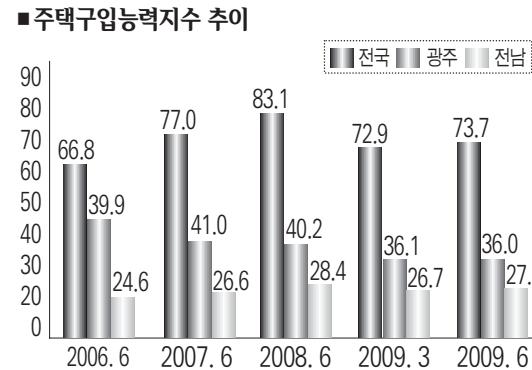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주택 구입 능력지수(K-HAI)는 광주가 36.0, 전남이 27.2로 전국 평균(73.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광주도 6대 광역 시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구입 능력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도시 근로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다는 뜻이며,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집값의 50%를 대출해서 주택을 샀을 때 대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득의 25%를 넘을 정도로 주택 구입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이다.

주택 구입 능력지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중간 소득과 아파트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광주·전남의 주택 구입 능력지수는 낮은 이유는 가계 소득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소득은 광주가 311만원, 전남이 337만원으로 전국 평균(334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아파트 가격은 광주가 8천300만원, 전남이 6천800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8천250만원)에 비해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택 규모별로 보더라도 광주는 대형인 135㎡ 초과만 K-HAI가 107.2로 기준치를 넘었고 60㎡(26.9), 60~85㎡(44.4), 85~135㎡(68.2)는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다. 전남은 모든 평형에서 기준치 100을 넘지 못했다.

또 전국적으로 지난 1분기(72.9)에 비해 K-HAI가 0.8포인트 상승하는 등 주택 구입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는 지난 2007년 정점을 기록한 K-HAI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 구입 능력지수가 낮다는 것은 소득 대비 주택 구입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주택 가격이 싸고 상승 가능성에 낮아 재테크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공급과잉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 구입 능력지수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택 규모별로 보더라도 광주는 대형인 135㎡ 초과만 K-HAI가 107.2로 기준치를 넘었고 60㎡(26.9), 60~85㎡(44.4), 85~135㎡(68.2)는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다. 전남은 모든 평형에서 기준치 100을 넘지 못했다.

또 전국적으로 지난 1분기(72.9)에 비해 K-HAI가 0.8포인트 상승하는 등 주택 구입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는 지난 2007년 정점을 기록한 K-HAI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 구입 능력지수가 낮다는 것은 소득 대비 주택 구입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주택 가격이 싸고 상승 가능성에 낮아 재테크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공급과잉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미분양 9개월째 감소

8월말 현재 6,799가구 … 한달새 465가구 줄어

신규 분양 적고 세제 혜택·집값 상승 기대 탓

한 때 1만 가구 이상 치솟았던 미분양 아파트 수가 9개월째 감소하면서 7천 가구 아래로 하락했다. 건설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준공 후 미분양' 도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6천 799가구로 전달의 7천 264가구 대비 465가구(6.4%)가 줄었다. 지난 해 11

월 1만 3천 277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무려 6천 478가구가 팔려나갔다.

시는 미분양 주택이 이처럼 꾸준히 감소한 원인으로 건설업체들의 가격 할인 및 각종 세제 혜택,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을 들어 새로운 공급을 자체한다, 올 상반기부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아파트 매수세를 자극했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은 오는 2010년 6월 30일 이전까지 취득(이전 등기 완료) 한 미분양 아파트로, 이 경우 취득세 액과 등록세액이 75% 감면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에서 미분양 확인서 및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율이 금융부채 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자산에서 부채를 뱉는 순자산이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파른 주가 상승 덕에 자산이 불어난 측면이 큰데다 1인당 빚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개인 금융자산은 1천82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말보다 95조8천억 원(5.5%) 증가한 액수다.

개인 금융부채는 818조4천억 원으로 15조9천억 원(2.0%) 증가했다.

개인 금융 순자산 1천조 돌파

자산에서 부채를 뱉는 순자산은 1천7조1천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자산 증식은 주가 상승 등 평가이익의 영향이 커졌다. 자산 증가액 가운데 실제 거래에 따른 액수는 42조7천억 원이었고, 나머지 53조1천억 원은 시가 또는 환율 변동 등 비거래 요인으로 증가했다. 부채 증감률은 작년 12월 말 0.8%, 올해 3월 말 0.1% 까지 줄곧 하락하다가 이번에 상승했다.

노동청은 14일 “임금 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이나 업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고의로 체불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업종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침체 여파로 체불 임금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노동청은 8월 말까지 2천663개 사업장에서 227억 원(6천600명)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204개 사업장에서 177억(5천473명)의 임금 체불이 이뤄졌던 것에 견줘 사업장은 20.8%, 체불 금액으로는 20.7%가 증가한 것이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징계점검에 나서 146억 원을 청산하고 65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 처리하는 한편,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888명에게는 체당금 39억 원을 지급했다.

노동청은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주의 부도·파산으로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